

생운 zola 잘 가르치는

1타 같은 N타

Zola 생운 1

<개념의 모든 것>

n회독을 위한

I. 자료 교재

오르비 클래스 교재(<https://class.orbi.kr/>)

교재 구성의 ‘특이’ 사항과 Zola의 의도

Zola 생운 1의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 자료 교재

II. 문제 교재

각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I. 여러분이 챙겨가야 할 교재는 <자료 교재>입니다.

n회독 하십시오! Zola의 자랑거리이자 현강생(특히 고4 이상)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료집입니다. 현 교육과정의 5종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물론이거니와 13년부터 시작된 생운의 교과서, 평가원 및 연계교재(ebs 수특과 수완) 자료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원전과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적절한 논문이나 대학 교재들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와 함께 다양한 연습 문제들을 실었는데, 여기 실린 문제들은 중급 이상의 난이도들입니다(최상급 다수). 그래서 반드시 개념 공부(백지 복습) 후에 문제를 풀고, 처음 풀 때는 문제에 답을 표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연습장에 답을 표시하든, 여백에 표시하든 하세요). 최소 2번 이상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 주: 교과서 자료를 언급할 때 현행 교육과정(15 개정)은 교과서 출판사 ‘만’ 언급하였고,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 출판사-해당 교육과정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예) 비상교육 → 15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

비상교육-09개정 → 09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09 개정은 16학년도~20학년도까지)

II. <문제 교재>는 활용도가 높은 평가원 기출들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평가원 기출입니다. 시중의 교재들을 보면 사실 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비추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좋은 문제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입니다. 여기에 학습에 도움될 만한 교육청 문제들과 ebs 및 사설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을 연습시키기 위해 ‘주관식’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들만으로도 시중의 기출 문제집 1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량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언급한 자료 부분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기본과 심화 모두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III. 개념 교재는?

Zola가 제공하는 개념 교재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필기 노트가 개념 교재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개념 정리 부분에 별표나 밑줄을 긋고 외우는 것으로 개념 공부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참고서(ebs 포함)를 n회독을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개념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개념 정리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교재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념 노트를 만드세요. 만드는 법은 탐구 공부법 안내 인강인 ‘망하는 생운, 성공하는 생운’ 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의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것을 수능 때까지 백지복습 및 n회독 하시길 바랍니다.

Zola의 교재가 그리고 강의가 올해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공+즐공=대박!!!

교재 목차

* 번호: 대단원-순서

예) 1-1 ⇒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주제라는 의미임.

1-1: 윤리학의 구분 --- 5

1-2: 동양 윤리+자연관 --- 10

1-3: 서양 윤리 --- 23

1-4: 도덕적 추론 --- 46

1-5: 토론, 밀의 자유론 --- 49

2-1: 죽음관 --- 53

2-2: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자살, 동물 실험) --- 58

2-3: 성·사랑 --- 62

2-4: 결혼과 가족의 윤리 --- 66

3-1: 직업 사상이 --- 70

3-2: 직업 윤리(기업, 전문직, 공직자) --- 76

3-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니부어) --- 79

3-4: 사회 정의의 분류(아리스토텔레스) --- 85

3-5: 분배 정의 --- 88

3-6: 소수자 우대 정책(차별과 역차별) --- 104

3-7: 교정 정의(형벌, 사형제) --- 106

3-8: 국가와 시민의 윤리(1) 국가관 --- 119

3-9: 국가와 시민의 윤리(2) 시민 불복종 --- 138

4-1: 과학기술과 윤리 --- 149

4-2: 정보윤리+매체윤리 --- 153

4-3: 자연과 윤리(서양의 자연관) --- 156

4-4: 환경 문제와 미래세대 --- 181

5-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 186

5-2: 의식주 윤리 --- 193

5-3: 다문화 윤리 --- 198

5-4: 종교와 윤리 --- 201

6-1: 갈등과 소통, 민족 통합 --- 208

6-2: 국제관계와 국제분쟁 --- 213

6-3: 국제 평화와 정의 전쟁 --- 217

6-4: 세계화와 해외 원조 --- 226

zola amazing 답 + 설명 --- 237

3-9: 국가와 시민의 윤리(2) 시민 불복종

☞ Zola '시민 불복종'만 따로 정리한 부분임. 교과서는 3-8과 3-9를 같은 단원으로 다룸.

1. 소로

[참고] 헨리 소로[Henry David Thoreau]



요약: 미국 사상가 겸 문학자.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인두세(人頭稅)의 납부를 거절한 죄로 투옥당했으나, 그때 경험을 기초로 쓴 《시민의 반항》은 후에 간디의 운동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출생-사망

1817.7.12 ~ 1862.5.6

국적: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출생. 하버드대학교 졸업 후에 토지 측량을 하기도 하고 가업인 연필 제조의 일을 돕다가, 1837년 선배인 에머슨을 알게 되어 그의 집에서 3년간을 기거하며 '초월주의자 그룹', 즉 콩코드 집단에 가담, 기관지 《다이얼》에 번역물이나 논문을 실었다.

1845년 여름부터 1847년 가을에 걸친 월든 호반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쓴 《숲속의 생활 Walden, or Life in the Woods》(1854)은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그가 죽은 뒤에 나온 《메인의 숲》이나 《코드 곶》(1865)은 그의 순수 자연애의 접근의 기록이며, 《일기》(14권, 1906)는 엄격한 자연 관찰의 정점을 보여준 기록이다.

소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1846년 7월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인두세(人頭稅)의 납부를 거절한 죄로 투옥당했으나, 그때의 경험을 기초로 쓴 《시민의 반항 One Civil Disobedience》(1849)은 후에 간디의 운동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또 **1850년 의회에서 통과한 도망노예법에** 반대하여 1854년 보스턴에서 강연을 하였고, 다시 **1859년 하퍼즈 페리의 반란에 즈음하여 '존 브라운 대위 변호'를** 여러 곳에서 강연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헨리 소로 [Henry David Thoreau] (두산백과)

■ 도망노예법[Fugitive Slave Laws]

요약: 도망한 흑인노예를 소유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1793년과 1850년 2차례에 걸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

1793년의 법은 배심(陪審)없이 연방판사가 도망노예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이 발표되자 이에 반대하는 지하철도운동이 확산되었고, 이를 무효화한 자유법이 북부 여러 주(州)에서 제정되었다. 1850년의 법은 이 법의 집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망노예의 증언이나 배심 재판을 금하며, 노예를 도망하게 도와준 자의 처벌을 정하였다.

그 결과 노예의 도망을 돕는 지하철도운동이 더욱 확산되었고, 북부에서는 새로운 자유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북대결을 격화시켜 남북전쟁을 일으킨 한 원인이 되었다. 1850년의 도망노예법은 남북전쟁 중인 1864년 7월 28일에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 하퍼스 페리(지역)의 반란

1859년 노예 폐지론자인 **존 브라운**이 이 곳(하퍼스 페리)에서 노예 해방 반란을 일으켰다. 하퍼스 페리는 당시 병기창이었고, 병기창을 약탈한 무장봉기였다. 이 반란은 곧바로 진압되었지만 남북 전쟁 발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tiggernpooh/222098219683> 각색

☞ Zola 소로는 저항(resistance), 혁명(revolution), 시민 불복종(disobedience)에 대한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실제로 소로가 직접 시민 불복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음.

출처: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시민불복종)”, 미래엔, 비상교육, ebs

(1) 시민으로서 실제로 말하자면 나는 이른바 스스로 무정부주의자라고 칭하는 자들과는 다르다. 나는 지금 정부가 없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좋은 정부를 원할 뿐이다. 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존경할 정부가 어떤 것인가 말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러한 정부를 얻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시민은 잠시 동안이나 아주 적은 정도라도 반드시 자기의 양심을 입법자들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는, 어떤 때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라. ... 바보 같은 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로부터 빚어질 엄청난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독재 정치는 독재자가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동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한다면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하라.

(2) 모든 사람들에게는 혁명의 권리가 있다. 즉 너무 지나친 독재나 무능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는 정부에 저항해야 한다. ... 이제 정직한 사람이라면 즉각 반항하고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 물론 부당한 일이라면 극악한 일에 이르기까지 온몸을 바쳐 모조리 뿌리 뽑는 것이 인간의 의무는 아니다. 다른 관심사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부당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3) 누군가를 부당하게 감옥에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다. ... 노예의 나라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명예롭게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은 감옥 뿐이다. ... 당신의 표를 모조리 던져라. 단지 종이 쪽지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모두를 던져라. 다수에 순응하는 소수는 무력하다. 아니 소수라는 이름조차 과분하다. 그러나 소수가 온 힘을 다해 가로막으면 그 힘은 불가항력이 된다. 정의로운 사람을 모두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를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정부는 꼼짝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설사 올해 천명의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세금을 냄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폭력을 휘두르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만큼 폭력적이고 유혈적인 행위는 아닐 것이다. 만약 평화적인 혁명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실로 이것이야말로 평화적인 혁명의 의미이다.

(4)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나는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심지어 여러 면에서 아는 것도 적고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기꺼이 복종할 마음이 있어도 아직 정부의 권위는 불순하다. 정부가 정말 정정당당하기 위해서는 피통치자 본인의 허락과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내가 동의하는 한에 있어서만 내 몸과 내 재산에 대해 완벽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국가는 개인을 더 고귀하고 더 독립적인 힘으로 인정해야 하며 국가의 모든 힘과 권위가 그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그에 걸맞게 개인을 대해야만 그 후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계몽된 국가가 존재하게 되리라.

☞ Zola ‘소로’적 느낌을 느껴봐. (미래엔, 09 개정, 환경 윤리에서 나오는 자료임), 소로, “월든”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드득후드득 떨어지는 빗속에, 또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너무나도 감미롭고 자애로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 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적인 감정이었다. ... 나는 사람들이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장소에서도 나와 친근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분명히 느꼈다. 나에게 혈연적으로 가장 가깝거나 가장 인간적인 것이 반드시 어떤 인간이거나 어떤 마을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장소도 나에게서 낯선 곳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2. 룰스룰!!

출처: “정의론”, 교과서(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ebs

(1) 나는 우선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定義)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2)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 행위는 ‘마지막 수단’이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는 사회 정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 즉 의회·청원·선거를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소용이 없어야 한다. 셋째,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넷째,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3) 시민 불복종은 … 첫째, 시민 공통의 정의와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인 신념에 의거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요건이 될 수 없다. 둘째, 공공적 행위여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공공 원칙에 관련된 것을 양심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공공 원칙에 관한 논의인만큼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비폭력적이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동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4) 현존 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때로는 어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요구 사항들은 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5)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르게 된다.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6)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 2원칙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할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이 만족되었는지를 판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원칙들이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결국 그것은 제도 속에 선명하게 표현되어야만 할 어떤 엄격한 요구 사항들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들이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나 재산을 소유하고 이주할 권리가 거절될 때, 혹은 어떤 종교 단체들은 억압받고 다른 어떤 단체들은 여러 가지 기회가 거절될 때 이러한 정의롭지 못함은 모든 이에게 분명할 것이다.

(7)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저항함으로써 정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온다.

(8)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Zola] 어떤 법의 부정의함에 항의하기 위해 교통 법규에 관한 법을 어길 수 있음).

(9) 그런데 시민 불복종을 하기 위한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제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 우리가 시민 불복종에 의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 제3의 당사자, 이른바 무고한 사람을 침해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 ...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 내에서 행위하고 있으나 만일 우리의 행위가 다수자의 거센 보복을 유발하는 데 이용될 뿐이라면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 셈이 된다. 확실히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합당한 항의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으나 그 행위가 보다 넓은 공동체에 대해서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적절하게 계획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불복종은 공의회에서 일어나는 청원의 한 양식이므로 그것이 이해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자들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론이 이러한 실제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

(10) 시민 불복종은 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의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불법적 항거에 가담할 수가 있다. 나는 이러한 원리들이 계약론에 의해 해명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11) 호전적인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영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며 법질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반대를 나타낸다.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적이라고 생각되거나 그 자체가 공표한 이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변화나 혹은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방도까지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무력에 의한 행위나 다른 종류의 저항도 분명히 정당화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경우들을 고찰하지 않겠다. 여기서의 나의 목적은 시민 불복종을 정의하고 거의 정의로운 입헌 체제 내에서 그것이 갖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한정된 것이다.

(12)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는 ... 상해하고 해칠 가능성이 있는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청원의 양식으로서의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없다. ...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의 표현이어서 그것은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위협일 수는 없다.

(13) 입헌적 체제에서는 법정이 최종적으로 항의자들의 편에 설 것이며 항의받은 법이나 정책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선언될 것이다. ... 법정은 항의자들의 행위가 갖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의 바탕을 이루는 정치적 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야 하며, 이러한 근거로 해서 법적인 제재를 줄여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보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필요한 배경들을 결여할 경우에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은 일반적으로 정의감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합당하고 효율적인 반대 형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14) 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여건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나는 논의를 국내의 제도에만 제한해서 일정한 사회에 내재하는 부정의를 다루고자 한다. ... 물론 열거된 조건들은 가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것이며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다른 논거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p.484)

(15) 양심적인 거부 혹은 기피와 시민 불복종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양심적인 거부는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형식이 아니다. ... 공동체의 신념에 호소하지도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양심적 거부는 공개 석상에서의 행위도 아니다. ... 양심적인 거부는 반드시 정치적 원칙에 그 바탕을 두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법질서와 상반되는 종교적 원리나 혹은 다른 어떤 원리에 기초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양심적인 거부가 정치적인 원리에 근거를 둘 수도 있다. ...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 간에 분명한 구분이 없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3. 영어

출처: “실천 윤리학(3판, 연암서가)”, 교과서, ebs

(1)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이 언제나 그릇된 일임을 입증해 주지는 못한다. 합법적인 통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하여 가까운 미래에 변화를 일으킬 전망은 매우 빈약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법적인 통로를 통하여 느리고 고통스러운 전진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전혀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단시키고자 하는 옹호될 수 없는 그릇된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 합법적 수단에 의한 변경의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성공적일 것 같은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강력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적법한 통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기껏해야 합법적인 수단들이 시도될 때까지는, 그러한 수단의 사용이 바라고 있는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들을 연기할 이유밖에는 못된다.(pp.460~462)

(2) 다수결의 원리는 실질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대의 북미, 유럽, 인도, 일본, 혹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나치 시대의 독일과 같은 독재정권 하에서는 불복종이 보다 쉽게 정당화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다수를 강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될 행위를 꺼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는 다수결의 규칙에 대한 반대가 되고, 다수결의 규칙 외에 받아들일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의 결정이 너무도 소름끼치는 일이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수에게 강압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진정한 다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복종할 책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수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극단적 상황에서만 그것에 불복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대체로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첫 번째 방식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그러한 결정이 다수의 견해의 진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심각하게 그릇된 일이어서 다수에 반대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은 첫 번째 근거에 의한 불복종이다. 이러할 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확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이 모든 경우에, 현대의 시민불복종의 표준적인 형태들, 즉 수동적 저항, 행진 혹은 연좌는 적합하다.(p.467)

(4)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혹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원들에게 설득하려는 것이거나, 이전에는 관료들에게만 맡겼던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하거나, 너무 서둘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재고를 호소하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다수를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법률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다수에게 불편을 주기는 한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이므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p.468)

(5) 시민불복종은 자주 정당화될 수 있다. …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불복종은, 예를 들면, 댐이 건설에 의해 야기되는 대체할 수 없는 야생의 상실을, 혹은 거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를, 공중에게 알린다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6) 명백히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도 훨씬 어렵다. (나치식의 대량학살정책과 같은) 엄청난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것 같은 어떠한 수단도 실제로 사용한다고 해도 정당화된다. … 다수는 다수 자체의 판단에 대해서 또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다수의 결정이 그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7)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문해 보아야 할 다른 도덕적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예를 들자면, 실험자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은 동물실험의 옹호자들로 하여금 동물실험에 대한 모든 비판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낙인찍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p.472)

(8) 결과주의적 접근법의 한 결론은, 언뜻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이 배이면 배일수록 불복종은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이 아니라, 어린 나무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잘 자란 표본은 보다 거칠게 다루어도 견뎌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진리의 다른 예일 뿐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불복종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독재나 내전을 겪은 나라나 민주주의 정부체제의 수립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당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p.472)

(9) 게나렐리의 실험실 습격*처벌(폭력적 행위), 그것은 사회의 종족주의적인 편견 때문에 오직 동물에게만 수행되는 고통스러운 실험으로부터 많은 동물을 구하자는 특정한 단기적인 목표일 수 있다. 그러한 행위가 또 다시 결과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는 실제 상황의 자세한 내용에 달려 있다. 폭력은 ...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중요하다.

* 동물단체가 게나렐리 박사의 실험실을 습격한 사건임.

[참고] <https://blog.naver.com/bowwowmeow/220589409981>

[참고 1] 서석원,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싱어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롤스와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 그러나 싱어는 롤스가 정당화 근거로 삼고 있는 공유된 정의관(the commonly shared conception of justice)이 오히려 시민불복종의 정당화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Zola 외울 것은 아니고 싱어가 공리주의자라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독해로 풀면 됨. 기본적으로 생윤은 비교·쟁점형이 많기 때문임.

[참고 2] 롤스와 싱어 비교(출처: 네이버 카페 pollo)

싱어는 롤스의 기본적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①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되는 공유된 정의관과 관련하여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정의관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으며, ②실제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도 문제가 있거나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관점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이라고 비판하였다.

4. 드워킨

(1) 천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의 동기나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민 불복종의 유형이 나누어진다.

먼저 양심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반대하거나 도망친 노예를 노예 주인이나 관리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이 불복종 행위 자체가 도덕적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정의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흑백 분리 식당에서 흑인이 백인의 좌석에 앉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고,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하면서 국가의 전쟁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정책 자체가 비도덕적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복종하는 경우이다.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이용하여 자국을 방어하는 것에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Zola 드워킨의 시민 불복종의 3가지 유형은 천재 교과서 읽기 자료에 나오는 부분임. 평가원에서 관련 문제를 내기 전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을 듯(처음에는 독해형이나 적용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2)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저항해야 한다. ... 시민들의 충성은 법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것이다. 시민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숙고를 거듭하여 기존의 법원의 판결이 그릇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원리의 문제들”

[참고 자료] 시민불복종 정당화 근거

이 논문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드워킨은 헌법에 의거하여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헌법에의 합치성, 즉 합법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모순적이다. 또한 도덕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헌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의한 정당화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이러한 입장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롤스는 공유된 정의감이나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정의관이나 정의감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시민불복종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싱어는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버마스는 롤스나 싱어와는 다르게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같은 형식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실질적인 도덕 원칙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판단의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손철성,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

☞ Zola 하버마스에 대해서는 몰라도 됨(참고로 하버마스는 윤사에서 다름).

zola 풀어!!

219)[23-10교-10 활용,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보셈.

갑: 시민 불복종은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을: 시민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 해 보아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불의한 모든 법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갑: 시민 불복종의 최종 목적은 사회 체제의 근본적 변화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은 헌법에 근거한 법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진 않지만 강제하는 위법 행위이다.
- ⑤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220)[ebs 활용] 갑, 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이란 틀 안에서 행해져야 할 최후의 저항 수단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기존의 법이 보다 상위의 근본 원칙인 정의를 위배할 때 일어나야 하며, 정의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과 처벌 감수의 부분에 있어서까지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을: 합의된 정의관 안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정의관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정의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민주적으로 소화되지 못할 때는 ‘불법’까지도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은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약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가치는 내팽겨 쳐진 채 법률 위반을 내세우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들먹이는 그 태도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 ① 갑은 법이 공유된 정의관을 어길 경우에만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다고 본다.
- ② 을은 공동체 내에서 단일한 정의관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시민 불복종이 처벌을 기꺼이 감수하며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④ 을은 시민 불복종에 보다 다양한 저항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⑤ 갑, 을 모두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공동체에서 합의된 정의관에 대한 저항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221)[24-10교-8+이것 저것, 응용]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해왔지만 그 호소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최후의 대책으로 시민 불복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기>

- ㄱ. 유권자 다수가 공개적으로 참여해야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된다.
- ㄴ.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서 법률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ㄷ.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양심적 행위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있다.
- ㄹ.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ㅁ.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ㅂ. 국가의 처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 ㅅ. 시민 불복종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ㅇ. 이익 집단에 의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ㅈ.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시민 불복종이 제한될 수 없다.

222)[20-4교-7]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 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더라도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정치적으로도 양심적이고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신중한 신념을 표현하는 비공개적인 행위이다.
- ③ 시민 불복종은 그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의 거부까지 포함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 ⑤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223)[20-7교-16 활용,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갑: 시민 불복종은 전체 유권자에게 다수의 정의감을 근거로 법이나 정부 정책이 부정의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다.
 을: 시민은 한순간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길 수 없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감옥 뿐이다.

<보기>

- ㄱ. 갑: 시민 불복종 여부는 법의 부정의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 ㄴ. 갑: 시민 불복종으로 정의롭지 않은 정치 체제를 변혁해야 한다.
- ㄷ. 을: 법이나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방법이 실패했을 때만 행해야 한다.

224)[21-3교-7,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대체로 정의의 원칙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한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은 법을 어기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이다.
- ㄴ. 부정의한 사회라면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
- ㄷ.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이다.
- ㄹ. 소수자 투표권 제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다.

225)[ebs 활용, 윤사,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세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인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만일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로운 경우에 모든 사람은 현존 체제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는다. 사람들은 약속 혹은 다른 방식의 자발적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제도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다.

<보기>

- ㄱ. 정의 실현과 공공선 증진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ㄴ. 정의로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는 자연적 의무이다.
- ㄷ. 자연적 의무는 의무를 지키기로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
- ㄹ. 자연적 의무는 부정의한 법에 항상 저항할 것을 요구한다.

226)[21-10교-16]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도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을: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고 불복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병: 우리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정치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하여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에 앞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② 을: 시민 불복종을 할 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③ 병: 시민 불복종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④ 갑과 병: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양심적인 행위이다.
 ⑤ 을과 병: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227)[22-10교-19,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다 적합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보기>

- ㄱ. 갑: 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갑: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다.
 ㄷ. 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시민 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신념을 정당화 근거로 삼는 양심적 행위이다.

228)[ebs 활용,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입법부가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인민이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그들의 원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대한 항의이다. 그러나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변화나 혁명적인 변화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

<보기>

- ㄱ. 갑: 정부는 인민의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ㄴ. 갑: 정부가 인민의 자유와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인민은 정부에 저항할 수 있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은 전투적인 행위나 강력한 조직적 저항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ㄹ. 을: 개인의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의 호소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ㄱ. 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지 않다.
 ㄴ. 갑과 을: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혁명을 시도할 수 있다.

zola amazing 답 + 설명

[주의] 아래에

50%	28%	8%	4%	9%
-----	-----	----	----	----

와 같이 제시된 것은 선지 ①~⑤의 정·오답률(메가스터디 공개 자료)임. 단, 필요한 경우에는 ebsi 통계와 종로 내부 통계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문항 분석할 때 참고하시길 바람. 오답률이 15% 넘어가는 선지들은 주의깊게 살펴보고 15%보다 낮은 선지들은 별도의 분석없이 가볍게 넘어가도 됨.

- 1) 기술
- 2) 기술
- 3) 규범. 이론과 실천 중에서는 이론쪽이 강함.
- 4) 규범. 이론과 실천 중에서는 이론쪽이 강함.
- 5) 메타
- 6) 메타
- 7) O
- 8) O
- 9) O
- 10) O
- 11) ① 규범(이론의 성격이 강함), ② 메타, ③ 기술, ④ 메타, ⑤ 규범(실천의 성격이 강함)
- 12) □

☞ Zola A-기술 윤리학, B-규범(이론) 윤리학

- 13) ③

- 14) □, □

[설명]

- (가):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 규범 이론 윤리학
 (나): 도덕적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다. ⇒ 메타 윤리학
 (다): 실제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 규범 실천 윤리학
 ㄱ. (가): 생명 복제를 허용해야 하는가? ⇒ 규범 실천 윤리학
 ㄴ. (나): 인생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가? ⇒ 규범 이론 윤리학
 ㄷ. (나):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메타 윤리학
 ㄹ. (다):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 규범 이론 윤리학
 ㅁ. (다):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의무인가, 자선인가? ⇒ 규범 실천 윤리학

- 15) ㄱ, ㄴ, ㄷ, ㄹ

- 16) 유

- 17) 불

- 18) 도

- 19) 불교를 가장한 사기꾼. 아무 사상도 아님

- 20) 도

- 21) 도

- 22) 도

- 23) 불

- 24) 모두

☞ Zola '도(度)'는 정도, 수준을 의미함. 요즘 같으면 한자가 약하므로 평가원이 좀 더 쉽게 풀어서 선지를 만들어 줄 것이므로 틀렸다고 너무 빠치지는 마세요.

- 25) 모두!!!

- 26) 도

- 27) 유

- 28) dog voice~도가 아님. 도가를 가장한 틀린 문장

☞ Zola 유·도·불 모두 '도에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함

- 29) 아무 것도 아님. 불교를 가장한 험~임

- 30) 도

☞ Zola '저절로'가 핵심어임. 저절로를 한자어로 바꾸면 '자연적으로'임. 저절로=자연적으로. 마지막 문장 없어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31) X

- 32) X

☞ Zola 불교는 불성을 타고 나는 것으로 봄. 따라서 본성을 생성(형성)하는 것이 아님.

- 33) 유

- 34) 도

35) 도

36) 도

37) 도

38) 도

39) 도

40) 유

☞ Zola '의리에 맞는 도리'가 핵심임. 의리는 인의예지의 '의'임. 도가 의에 맞다면 그것은 유가이지 도가가 아님. 앞 부분을 도가처럼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도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41) 도.

☞ Zola 참된 사람=진인. 삶을 받아도 기뻐하고 잃어도 기뻐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42) 도

☞ Zola 이 문장이 도가인 부분을 추론해보자면....

'공경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에서 '공경으로 효도'하는 것이 유가의 입장임. 유가의 효는 쉬운 것임. 그런데 유가에서는 공경으로 효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수양해야 함. 따라서 유가의 입장에서 공경으로 효도하기가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함. 결국 유가의 '효' 정도는 쉬운 건데 유가 애들이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것을 비판함.

마지막에서 '어버이를 잊기는 어렵다'에서 '잊는다'는 좌'망'으로 보면 됨. 즉 인간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좌망)은 쉽지 않음. 따라서 유가의 '효'보다 도가의 '좌망'이 더 어려운, 상급의 수양법임.

43) 유(맹자)

44) 불

45) 유

46) (가)-도가, (나)-불가, (다)-유가

47) ① 불, ② 도, ③ 해당사항 없음(서양의 기계론), ④ 유, ⑤/⑥ 유·도·불 모두

48) ③

☞ Zola 정답률 90%의 문제임. 공부'만' 착실히 하면 됨. 핫팅~~

49) ②

4%	92%	3%	1%	0%
----	-----	----	----	----

50) ㄱ, ㄴ, ㄷ

☞ Zola 'ㄷ'이 출제되면 최고 난이도가 될 것임. 실제로 윤사는 한 번 출제된 적이 있고, 다들 전멸 당했음. 도의 관점에서는 귀천이 없는데, 다른 것의 관점[인간의 관점과 사물의 관점]에서는 귀천이 있다는 것으로 외울 것.

51) ③

9%	4%	64%	6%	17%
----	----	-----	----	-----

☞ Zola ③을 고르지 못해도, 나머지 오답 선지 4개를 확실하게 제길 수 있어야 함.

52) ㄱ, ㄷ

☞ Zola 제시문이 '유학'이 아니라 '도가'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과 독해력이 필요함. ㄴ은 동양 사상이면 동의할 내용임. ㄹ은 도가에만 해당함.

53) ㄷ, ㄹ

☞ Zola 같은 장자, 을은 노자. ㄴ은 노자가 아닌 장자 얘기임.

54) ③

9%	9%	71%	2%	9%
----	----	-----	----	----

☞ Zola 도가(감)가 유가(을)를 비판하는 문제임.

55) ①

74%	9%	9%	4%	4%
-----	----	----	----	----

☞ Zola 우리나라 코로나 1번 환자(중국인)가 퇴원하면서 의자인심(醫者仁心)이라는 감사 편지를 쓴 것이 기억 나서 선별해 봤음. 이 제시문이 그것과 관련되는 제시문임. 남들이 아래 글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음.

[서울신문] “의자인심(醫者仁心)” 신종코로나 1번 환자 오늘 퇴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6500052>

56) ⑤

57) ④

2%	10%	6%	77%	5%
----	-----	----	-----	----

☞ Zola 같은 공자, 을은 노자이지만 유가와 도가로 풀면 됨

58) ①

60%	17%	6%	10%	7%
-----	-----	----	-----	----

☞ Zola ① 불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봄. 그게 연기법이고 공(空)임. 12쪽에 인용된 '천재' 교과서의 불교 설명 부분을 확인할 것.

59) ⑤

2%	6%	5%	3%	84%
----	----	----	----	-----

☞ Zola ② 동양 사상의 공통점에서 바나나 선지 설명을 하였음. 강의 다시 확인해 볼 것. 불성 '생성'이 아님.

60) ②

☞ Zola 이 정도면 생윤으로도 충분히 '답'은 나옴.

61) ⑤

☞ Zola ① 감: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 ⇨ '불변'='실체'임. 불가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 즉 만물이 불변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함. 불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이 생김.

62) ③, ④, ⑤, ⑥, ⑦

☞ Zola 틀리면 반드시 강의나 필기 다시 확인해야 함. 단순 암기가 아니라 도덕 원리를 응용하는 것임!

63) 답은 아래. 틀리면 반드시 강의 확인 또는 질문할 것!

- ① 행복의 원리는 준칙을 제공할 수 있다.(18-수능, 20-6, 윤사) 000
 ② 행복의 원리는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18-수능, 20-6, 윤사) 000
 ③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8-수능, 윤사) 000
 ④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18-수능, 윤사) XXX
 ⑤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을 따라야 한다.(21-6, 윤사) 000
 ⑥ 쾌락의 추구는 개인의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있다.(21-6, 윤사) 000
 ⑦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20-9, 윤사) XXX
 ⑧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19-수능, 윤사) XXX
 ⑨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19-수능, 윤사) 000
 ⑩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19-6, 윤사) 000
 ⑪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23-수능, 윤사) 000
 ⑫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22-수능, 윤사) XXX
 ⑬ 정언 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24-수능, 윤사) 000
 ⑭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25-수능, 윤사) XXX
 ⑮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 결정한다.(25-9, 윤사) XXX
 ⑯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언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25-9, 윤사) XXX

64) ㄱ, ㄷ

65) ③

17%	18%	34%	18%	13%
-----	-----	-----	-----	-----

66) ⑤

☞ Zola 정답률 48%임. 도대체 왜???

67) ①

68) ㄱ, ㄷ, ㄹ

69) ③

14%	7%	48%	12%	18%
-----	----	-----	-----	-----

☞ Zola 의외로 정답률이 낮아서 놀랐음. 6평 (윤사) 문제인데 고3들은 9평 이후에 급 사람 성적이 오르는 경향이 있음. 대신 국수(영)에서 뺑구가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함!

70) ㄴ, ㄷ

☞ Zola 정답률 45%임. 도대체 왜???

71) ㄴ, ㄷ, ㄹ, ㅁ

☞ Zola ‘ㅁ’은 21-수능 선지임. 공리주의자들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면 됨. 칸트는 인격성(존엄성)을 적용하면 됨. 인격성은 절대적 가치로서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임.

72) ㄴ, ㄷ, ㄹ

☞ Zola 정답률 35%임. 도대체 왜???

73) ④

2%	2%	18%	74%	2%
----	----	-----	-----	----

☞ Zola 조사한 기관마다 정답률 편차가 심한 문제이다. 어떤 곳에서는 정답률을 56%로 추정하였다. 어찌되었건 ③은 답이 아니다. 의무‘에 맞더라도’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도덕적 가치는 없다. 그리고 ④는 들어 반복이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 곧 ‘법칙’이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언급하였다. 윤사에서 함정, 킬러 선지들까지 분석해서 강의를 하였으므로 여러분은 Zola를 믿고 따라오길 바란다!

74) ④

8%	5%	24%	47%	16%
----	----	-----	-----	-----

☞ Zola <보기> ㄷ 선택하신 분들 [Zola 생윤 O-바나나 제거 특강] 다시 들길 바람. 개념 강의(Zola 생윤 1)도 잘 보길 바람. ㄷ 관련 바나나식 풀이를 오르비 및 유튜브에 올렸음. ‘23 9 13 윤사(zola 바나나 제거)’ 검색해 보셈.

<https://www.youtube.com/watch?v=LYFhCH2EVr8>

75) ㄱ, ㄴ

☞ Zola 자연법 윤리의 하나인 스토아 학파의 글임. 윤사를 하지 않는 생윤 선택자는 풀기 힘들 수는 있음. 제시문에서 ‘자연’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길 바람.

76) ㄱ, ㄷ

☞ Zola 자연법 윤리의 하나인 스토아 학파의 글임. 제시문의 키워드 중에서 ‘우주’와 ‘이성’이 핵심임. 이래도 잘 모르겠으면 수업 필기 내용을 꼭 보셈. logos 근처에 필기되어 있을 거임.

77) ①

57%	15%	6%	5%	15%
-----	-----	----	----	-----

☞ Zola 자연법 윤리인지 알면 쉽게 풀림. 제시문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음. 자연법 윤리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자유임.

78) ①

☞ Zola 독해 또는 생윤 개념으로 맞출 수 있음!!

79) ㄱ, ㄴ, ㄷ, ㅁ, ㅂ

☞ Zola ㄴ과 ㄷ은 25-수능(윤사) 선지임.

80) ①

☞ Zola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 ② 후천적 덕 ③ 실천적 지혜-지성적 덕 ④ 덕윤리-행위자의 성품 중시 ⑤ 어떤 행위(살인)이나 감정(질투) 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임. 품성적 덕이 안 됨.

81) ㄷ, ㄴ

82) ㄴ, ㄷ

83) ①

84) ⑤

85) ②, ③

86) ㄱ, ㄴ, ㄷ

87) ③

88) ㄱ, ㄴ, ㄷ

89) ③

☞ Zola 정답률 35%임. 맨날 배려 윤리가 정의 윤리 비판하는 것만 풀다가 거꾸로 된 문제(정의 윤리가 배려 윤리 비판하는 내용) 푸니까 틀린 것임. '비판'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풀어야 함. 단, 겁 먹을 것 없고 Zola가 사고하는 연습 충분히 시키니까 걱정말고 따라오시면 됨.

90) ㄱ, ㄴ, ㄷ

91) ①

92) ②

1%	77%	3%	18%	1%
----	-----	----	-----	----

93) ⑤

3%	7%	4%	7%	79%
----	----	----	----	-----

94)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 Zola

(1) ㉠은 선행'과' 악함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고치면 정답이 됨(23 ebs 수완). 선보다 악의 인식이 쉽다는 것이지, 선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님.

(2) ㉡은 미래세대는 의존자이고 명령자이며, 현세대는 권력자이고 의무자이다.(21-수능-11 제시문 필수) 요나스의 의도를 알면 암기가 쉬워지긴 함. 현세대가 과학기술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현세대가 의무의 주체가 됨. 미래세대는 현세대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달라짐. 따라서 이들은 현세대에 의존하는 존재가 됨. 그래서 이들 미래세대는 현세대에게 예방적 책임(자신들의 존속)을 져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음.

(3) ㉢과 ㉣은 25-수능-11 기출 선지임.

95) ㄱ, ㄴ, ㄷ, ㄹ

96) 사실 판단(소전제) : 내가 나의 몸을 처분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이다.

97) 도덕 원리(대전제) : 여성의 선택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98) 도덕 판단(결론) :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

99)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옳지 않다.

100)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은(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101)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02)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03) 사실, 도덕(순서 상관없음)

104) 연역

105) X

106) X

107) X

108) X

109) X

110) X

111) X(비논리적-흑백 논리임. 미래엔 교과서 예시자료)

112) ㄱ, ㄴ, ㄷ(22 ebs 수특 참고했음)

113) ①, ②, ③, ⑤(23 ebs 수특임)

☞ Zola 대전제-㉠도덕 원리, 소전제-㉡사실 판단, 결론-㉢도덕 판단임. ④ ㉣은 사실 판단이므로 사실 관계(참·거짓)를 밝히는 것임.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오류 점검은 결론에서 행하면 됨.

114)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5) ④

☞ Zola 가로열쇠 A: 토의(검'토'하고 협'의'함) B: 여론

116) ④, ⑥(22~23 ebs 활용)

☞ Zola 한자는 순서대로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상성성(常惺惺)'임. 유가 사상으로 풀면 됨.

- 117) 자연(기)의 흐름으로 봄
 118) 살아 있을 때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이 많음
 119) 삶과 죽음이 차별없음, 순환의 과정
 120) (순서대로) 에피쿠로스, 도가(장자), 에피쿠로스, 도가(장자)
 121) ③

☞ Zola 의도적 행위=업(業). 오답 선지 중에는 어느 한 쪽 입장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니 신경쓰지 말 것.

[오답 설명]

- ①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 유가 입장임. 불가와 도가는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않음.
 ② 업(業)이 소멸하면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불가의 입장임. 도가는 부정함.
 ④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가?
 → 바나나 선지임!! 불가, 도가 모두 긍정.
 ⑤ 삶은 기(氣)의 생성, 죽음은 기의 소멸로 보아야 하는가?
 → 조심! 해당사항 없음. 도가에 따르면 죽음은 기의 흩어짐(소멸X), 삶은 기의 모임(생성X)임.

122) ①, ⑥

123) ①, ③, ④, ⑤, ⑦

124) 나-생명을 잉태한 여성, 바이올리니스트-태아, 음악 동호회 사람들-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하게 만든 사람

☞ Zola 원래 이 제시문은 톰슨(Thomson, J. J.)이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한 비유이다. 그에 따르면 태아는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여성은 태아를 도와야 할 아무런 도덕적 의무도 없다.

125) 글A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성(후천적인 성)을 설명하는 사례임. 글B의 경우 남녀 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 성(선천적 성)을 설명하는 사례임.

126) ☞ Zola 그림 보는 법을 알면 그만임. 외울 필요 없음. 아래 표 참고

사랑의 유형	친밀감	정열	헌신
(1) 좋아함	○	×	×
(2) 도취적 사랑	×	○	×
(3) 공허한 사랑	×	×	○
(4) 낭만적 사랑	○	○	×
(5) 열빠진 사랑	×	○	○
(6) 우애적 사랑	○	×	○
(7) 성숙한 사랑	○	○	○

127) ㄱ-책임, ㄴ-존경/존중, ㄷ-지식(이해)

☞ Zola 기출로 출제된 부분을 활용하여 지식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임. 이런 것을 놓치면 10년에 1번 통수 맞게 됨. 위 자료는 교사용 지도서 자료를 활용한 것임.

128) ①, ②, ③, ⑥, ⑦, ⑧, ⑩, ⑬, ⑮, ⑰

☞ Zola ⑮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기애’이다. 자기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양립 가능하다. 그러나 이기심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⑰ 생명을 준다는 것이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129) ③, ⑤

☞ Zola 여러분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에 나타난 효의 특징을 묻는 문제임! 독해 문제임.

130) ①, ④, ⑥, ⑧, ⑩, ⑫, ⑮

☞ Zola ㄱ은 효(孝), ㄴ은 인(仁)임. 선지 ⑮는 21-수능-8임.

131) ①, ④, ⑤, ⑪, ⑫, ⑬, ⑭, ⑮, ⑰

⑩ 형제애의 근원은 효의 근원과 서로 다르다. XXX.

☞ Zola 형제애 즉 우애의 근원과 효의 근원은 모두 인(仁)이다.

132) ㄱ. 21-수능

133) 없음. 마르크스, 14-수능

134) ㄴ, ㄷ. 칼뱅. 25-수능

135) 모두!! 플라톤임.

136) ㄱ, ㄷ.

137) ㄷ. 마르크스! 15-9

138) ㄱ, ㄴ. 18-수능

139) ㄱ, ㄴ, ㄷ. 마르크스. 18-6

140) 없음. 칼뱅. 17-6

141) 모두!! 순자. 16-9. 단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지식이 필요없는 문제였음.

142) ㄴ. 공자. 17-6

143) ㄱ, ㄴ. 순자. 15-6+22-9

144) ㄴ, ㄷ. 순자. 24-9

145) ㄱ. 19-6

146) 없음(모두 틀림). 25-9. 사상가는 플라톤임.

147) ㄷ, ㄹ. (가)는 플라톤, (나)는 정약용임.

148) ④

☞ Zola 갑(정약용)은 국어로 풀면 됨. 단, 을(맹자)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함.

⑤ 갑, 을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유가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을 국어로 풀어 서술한 선지임.

149) ⑤

150) ⑤

151) ④

☞ Zola ㉠에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적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다.’가 들어감. 따라서 반론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적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가 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가 제시되면 됨.

152) ⑤

153) ②

3%	85%	4%	4%	4%
----	-----	----	----	----

☞ Zola 바나나 제거 특강(Zola 생운 O)에서 다른 문제임.

154) ㄱ, ㄴ

155) 개인윤리-①, ⑧. 사회윤리-나머지 모두

156) [옳은 내용] ①, ③, ⑩

157) ㄱ, ㄴ, ㄷ

158) 아래 확인

[14-9-15, 78%]	사회 부정의는 <u>외적 강제력</u> 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O
[14-수능-19-ㄷ, 47%]	<u>사회적 강제력</u> 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O
[14-수능-19-ㄹ, 47%]	<u>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u> 은 배제하세요.	X
[15-수능-19-ㄱ, 41%]	<u>선의지의 통제</u> 를 받는 <u>비합리적 수단</u> 이 필요하다.	O
[15-수능-19-ㄹ, 41%]	<u>도덕적 설득</u> 과 <u>정치적 강제력</u> 이 병행되어야 한다.	O
[16-9-6, 79% // 20-9-6, 77%]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u>합리적인 사회 강제력</u> 을 권고한다.	O
[17-6-10-ㄷ,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선의지의 함양</u> 이 필요하다.	O
[17-6-10-ㄹ,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강제력</u> 의 사용이 필요하다.	O
[17-수능-5, 72%]	개인 간 갈등은 <u>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u> 으로 조정될 수 있다.	O
[18-수능-13, 89%]	진정한 정의는 <u>선의지만으로</u>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X
[19-6-13, 62%]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O
[19-수능-3, 54%]	<u>최소한의 강제력</u> 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
[20-수능-12, 91%]	<u>집단 간 정의 실현</u> 에 집단 이기심의 <u>상호 투쟁</u> 이 개입될 수 있다.	O
[20-수능-12, 91%]	<u>강제력만으로</u>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O
[20-수능-12, 91%]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O
[20-수능-12, 91%]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O

☞ Zola 도덕적 계몽으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집단 갈등을 완화시킬 수는 있음.

159) ☞ Zola 답은 모두 ‘모름(알 수 없음)’임. 그냥 님들의 생각일 뿐임. 그리고 평가원은 님들의 생각에 관심 없음. 강의를 반드시 들길 바람!!

160) 모두 O

161) ①

162) ㄷ, ㄹ

163) ④

21%	7%	6%	65%	1%
-----	----	----	-----	----

☞ Zola 국어로 독해 가능함. 제시문에서 ‘가령’ 즉 예를 든다는 것은 예를 통해 결론에 도달해 보라는 것이다. 즉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임. 우리가 알고 있는 롤스의 절차적 정의를 활용한다면 게임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는 (균등하든 안하든) 정의롭다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는 것이 정답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선지가 2개 있다. ①과 ④. 그런데 ①은 균등 분배인데 제시문에 근거해 보면 게임의 결과가 균등한 분배가 될지는 모른다(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또한 지식에 근거해 봐도 롤스가 균등 분배를 주장하진 않았다(이건 생운 선택자도 알고 있는 내용임). 결국 제시문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개념으로 문제가 풀림. 그런데도 윤사 선택자들의 정답률이 65%라는 것은 그만큼 독해를 안 한다는 것임. 하나 더. 제시문의 앞 부분에 공리주의는 독립된 기준이 있지만 살라 살라 그리고 자

기의 순수 절차는 공리주의와는 다르다고 함. 따라서 순수 절차는 독립된 기준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함. 결국 이 문제는 국어로 풀 수 있게끔 출제하였음.

[제시문과 선지] 나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제로 해석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분배 상태가 행복의 최대 총량을 산출하는지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체제는 우연한 여건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반면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이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등 공정했다면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의미하는 것은 [㉠]는 것이다.

- ①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 ②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없다
- ③ 공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 ⑤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절차도 없다

164) ㄱ, ㄴ, ㄷ, ㄹ

165) ⑤

166) ①

167) ②

1%	82%	1%	4%	9%
----	-----	----	----	----

168) ③

6%	26%	46%	7%	13%
----	-----	-----	----	-----

169) ㄱ, ㄴ, ㄹ

170) ㄱ, ㄴ, ㄷ, ㄹ

171) ㄷ, ㄹ

172) ㄴ, ㄹ

173) ㄱ, ㄴ, ㄷ, ㄹ, ㄹ

174) ⑤

175) ⑤

176) ④

177) ④

15%	5%	6%	68%	7%
-----	----	----	-----	----

178) ②

179) ②

180) X

☞ Zola 역차별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할 때 생기는 문제임. 제시문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임. 따라서 제시문과 역차별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

181) X

☞ Zola 역차별은 사회적 소수자 즉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역차별을 당한다. 즉 장애인을 보호하는 반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182) 답 (1) O, (2) O, (3) O, (4) O

☞ Zola 독해법을 익혀야 응용 선지가 풀림. 이런 선지를 틀리는 것은 개념 부족이 아님. 독해법은 Zola 강의 확인하셈!!

(1) 처벌의 해악이 처벌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사형 1명 살인 범죄 2명 방지]이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함.

[사형 2명 살인 범죄 1명 방지]이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2)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고통 정도 10 과락 정도 50]이면 범죄를 저지르겠지. 예방효과 없음.

[고통 정도 10 과락 정도 5]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 예방효과 있음.

(3) 형벌의 해악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

[범죄자의 고통]이므로 (2)와 같은 내용임.

(4) 처벌이 가져올 나쁜 결과보다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가 더 클 경우 처벌은 필요하다.

[사형 1명 살인 범죄 2명 방지]이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함. 즉 (1)과 같은 문장임.

183) 모두!

184) ③ **빼고 모두 옳음!** ③만 틀렸음!

185) ㄷ

186) ②

187) ②

☞ Zola 틀린 이유를 알면 빠질 것 같은 치사한(?) 선지들이 모여 있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임. 틀린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ㄱ. 범죄자 처벌도 정의로운 것임. 당연한 내용임.

ㄷ. 범죄자와 살인자 구분할 것. 도둑질한 범죄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188) ㄱ, ㄷ

189) ㄴ, ㄷ

☞ Zola ㄱ. 루소: 사형은 주권자가 위임할 수는 있어도 행사할 수 없는 권리임.

190) ㄴ, ㄷ

☞ Zola ㄹ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000

191) ㄱ, ㄴ

192) ㄱ, ㄷ, ㄹ

193) ㄱ, ㄴ, ㄷ, ㄹ, ㅁ

194) ㄱ, ㄴ

☞ Zola ㄷ. 베카리아. 형벌의 강도보다 지시;ㄱ도가 시민에게 더 큰 공포를 줌. 형벌의 강도는 공포는 주지만 일시적임.

195) ③, ⑤

196) ①, ③, ④, ⑤

197) ③

3%	2%	86%	3%	5%
----	----	-----	----	----

☞ Zola 같은 노자(도가), 을은 공자(유가)임. 동양 사상(1단원 내용)에 충실하면 쉽게 맞출 수 있음. 틀린 분들은 1단원 내용(교재 번호 1-2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것.)

198) ⑤

22%	14%	9%	12%	43%
-----	-----	----	-----	-----

☞ Zola 같은 노자, 을은 목자, 병은 한비자임. 풀이법은 크게 두 가지임. (1) 우선 갑과 을은 법과 술을 강조하지 않음. 법과 술을 강조하는 것은 한비자임. 그런데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함. 변화시키지 않음. 혹은 (2) 한 번에 갑, 을, 병 모두 본성 변화를 꾀하지 않음으로 해서 풀 수도 있음.

199) ⑤

☞ Zola ⑤가 바나나 선지임. 패권주의는 '힘 또는 무력으로 억압하는 정치'를 말함. But 갑, 을, 병 사상가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공부해둘 것. 같은 노자(도가), 을은 목자, 병은 맹자(유가)임.

200) ④

3%	12%	2%	79%	4%
----	-----	----	-----	----

☞ Zola 같은 도가, 병은 유가 정도인 것만 알면 됨. 단, 을은 한비자임을 알아야 함. 참고로 같은 노자, 병은 맹자임.

201) ㄱ, ㄷ, ㄹ, ㅁ, ㅂ, ㅅ

☞ Zola 사상가는 목자. ㄴ은 유가의 단계적·점진적·확장적 윤리임.

202) ㉠, ㉡, ㉢, ㉣

☞ Zola 같은 한비자(법가), 을은 순자(유가, 성악설)이다. 두 사람은 모두 성악설을 주장하였지만, 순자는 도덕적 교화의 가능성을 긍정하였고 한비자는 부정하였다. ㉠ 한비자는 이기적 욕망을 본성으로 보았다.

203) ㄱ, ㄴ, ㄷ

☞ Zola 같은 공자(유가), 을은 노자(도가)임. 유가와 도가로 풀면 됨. ㄹ은 님들 입장에서는 말장난일 듯. 갑 제시문의 첫 문장이 함정 문장임.

204) ㄷ, ㄹ

205) ㄴ, ㄹ

☞ Zola 고대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행복=덕의 실현)임. 서양 윤리 이론(교재 번호 1-3)에서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206) ㄱ, ㄴ, ㄷ, ㄹ

☞ Zola 같은 본성론(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헤택론(흠)임. 개념과 독해로 풀이가 가능함.

207) ③

208) ②

☞ Zola 갑을 로크, 을은 루소임.

209) ②

2%	74%	15%	4%	2%
----	-----	-----	----	----

☞ Zola 갑은 로크, 을은 루소임. but(벗뜨) 님들은 사회계약론이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답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함.

210) ④

8%	7%	16%	60%	9%
----	----	-----	-----	----

☞ Zola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로크임.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서 Zola가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남.

211) ㄱ, ㄷ, ㅁ

212) ①

60%	10%	9%	15%	6%
-----	-----	----	-----	----

☞ Zola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흠(헤택론)임.

213) ①

64%	21%	2%	10%	3%
-----	-----	----	-----	----

214) ④

5%	10%	15%	63%	4%
----	-----	-----	-----	----

☞ Zola 갑-아리스토텔레스, 을-로크, 병-롤스임. ④ 롤스의 경우 시민 불복종할 때 저항권의 개념을 강의하니

참고할 것.

215) ③

☞ Zola 갑-아퀴나스, 을-홀스. 아퀴나스(갑)의 경우 서양 윤리 이론(주제 번호 1-3의 의무론)에서 다루었고 그 지식으로 풀 수 있음. 선지 ⑤는 몰라도 될 듯(아퀴나스는 모든 법의 근거를 영원법으로 봄).

216) ④

11%	2%	3%	79%	5%
-----	----	----	-----	----

217) ㄱ, ㄷ

218) ㄱ, ㄴ, ㄷ

219) ③

220) ⑤

☞ Zola 을이 '싱어'임. 싱어가 롤스의 '공유된 정의관'을 비판하는 내용임. 잘 알아둘 것. 자료교재의 '참고 2'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임.

221) ㄱ, ㄷ

222) ①

☞ Zola '문장'으로 장난을 쳤음. 이런 선지 조심해야 함.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XXXX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나 정책이다. OOOO

223) ㄱ, ㄷ

☞ Zola <보기> ㄷ이 해석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중의적 문장)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바꾸었음.

[원 문장] ㄷ. 을: 모든 법의 준수가 불의를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4) ㄱ, ㄷ, ㄹ

225) ㄱ, ㄴ

☞ Zola 롤스의 '자연적 의무' 알아둘 것!

226) ⑤

☞ Zola 세 사상이 모두 '다수결'이 기준이 아님.

227) ㄱ, ㄴ, ㄷ

228) ㄱ, ㄴ, ㄷ, ㄹ, ㅁ

☞ Zola 갑-로크, 을-롤스

229) 예) 성찰적 이성

230) 이 제시문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반론이다. 과학 기술에 따라 그 자체로 가치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31) ④

232) 요나스라면 '칼'과 달리 '원자폭탄'은 전지구적이며 먼 미래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칼이 지닌 위험성과 원자폭탄이 가진 위험성은 전혀 다르다고 대답할 수 있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위험 즉 장기적이면서 전지구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보고 기존의 윤리로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 즉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33) ⑤

2%	1%	2%	2%	93%
----	----	----	----	-----

☞ Zola 독해 문제임. 과학 기술의 부자연스러움(강제성)에 대한 글로 이해하면 충분할 듯

234) ㄴ, ㄹ

☞ Zola 갑은 하이데거, 을은 야스퍼스임. 단, 사상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갑은 가치 개입성, 을은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을 독해할 수 있는 독해력과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의 개념을 알면 됨.

235) ㄱ, ㄷ

☞ Zola 갑은 하이데거, 을은 야스퍼스임.

236) 전자정보기술이 민주주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빠름-오판, 단순, 고립)을 줌

237) ㄷ, ㄹ

238) 데이터 스모그, 정보의 홍수, 무의미한·불필요한 정보의 범람 등등

239) ④

1%	1%	1%	95%	2%
----	----	----	-----	----

240) 갑-ㄱ, ㄴ, 을-ㄱ, ㄴ

☞ Zola 갑과 을 모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임. '을'을 요나스로 착각하는 바나나들이 많음!

241) ①, ②.

☞ Zola ③은 무조건 오답. 수업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242) ㄱ, ㄴ, ㄹ, ㅁ

243) ①, ④

☞ Zola 개념과 독해가 함께 활용되면 풀 수 있음

244) ⑤

☞ Zola 선지 ②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음!!!! 선지 ②를 골랐든지 헛갈리면 zola 생운 0(무료 특강)을 꼭 들길 바람!

245) 생태 중심주의

☞ Zola 레오폴드의 글임. 그러나 레오폴드라는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님. 생태 중심주의를 알 수 있는 독해 point가 있음. 강의에서 확인할 것!

246) ④

☞ Zola 개념형 독해 연습용으로 정말 좋은 문제임. [소나 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울창한 삼림을 베어 목초지로 조성해도 괜찮다]에서 이 입장은 소·말과 삼림·목초지 사이에 경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입장은 감정(동물) 중심주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47) ②

☞ Zola 정답률 28%임. 왜????

248) ㄱ, ㄴ, ㄷ

249) ⑤

☞ Zola 바나나 연습용임.

250) ④

251) ㄷ, ㄹ

☞ Zola ㄱ이 바나나 연습용임. 왜일까? 강의에서 확인할 것!!

252) ①

☞ Zola 을 사상가를 테일러 혹은 생명 중심주의로 파악한 분들은 생태 중심주의 강의 다시 확인하세요~~

253) ㄴ, ㄷ, ㄹ

254) ㄱ, ㄹ

255) ㄷ, ㄹ

☞ Zola ㄱ, ㄹ이 바나나 선지임. ㄱ은 거짓(인간도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음. 칸트 윤리 이론임.). ㄹ은 참임.

256) ㄷ

257) ㄱ, ㄷ, ㄴ, ㄹ

258) 인간/칸트

259) 생태/레오폴드

260) 인간/칸트

261) 생태/물라도 되는 사상가임. 독해를 할 수 있으면 됨.

262) 인간/칸트

263) 동물/레건

264) 인간/패스모어

265) 생명/테일러

266) 동물/싱어

267) 인간/칸트

268) 동물/싱어

269) 동물/레건

270) 생명/테일러

271) 인간/아퀴나스

272) 동물/레건

273) 생태/레오폴드

274) 동물/싱어

275) 생태/레오폴드

276) 인간/칸트 →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독해법 강의했음.

277) 생태/레오폴드

278) 생명/테일러

279) 인간/칸트

280) 동물/레건

281) 생태/레오폴드

282) 동물/싱어

283) 인간/칸트

284) 생태/레오폴드

285) 동물/레건

286) 생태/레오폴드

287) 동물/싱어

288) 인간/칸트

289) 도표 참고

선지	인간	감정	생명	생태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0	0	0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0	0		0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0	0	0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0	0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0	0	0
인간에 대한 의무 외의 다른 도덕적 의무는 없다.	0			
모든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0	0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0	0	0	
종(種)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0	0	0	0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	0	0	0

290) 현재의 경제·산업에 제한이 필요함. 자연 보호가 필요함. 지구 자원은 유한함.

291) ①

292) ㄱ, ㄴ

293) ㉠㉡㉢㉣

A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임. A는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으며, 개발과 보전을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실행하자는 것임.

294) 가(예술의 자율성) // 나, 다, 라(예술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봄)

295) Zola 간단 비교표임. Zola의 독해임. 핵심어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참고할 것.

	윤리(선)	예술(미)
공통점	자유(자율), 무관심성	
차이점	외면	내면
	체험 전(전제)	체험 후(결과)
	사고	느낌
	간접 확인	직접 인식

296) ①, ③, ④, ⑥

297) ①, ③, ⑥

298) ④

299) ④

Zola 선지 ② 오답률이 약 40%임. 제시문 갑 사상가가 '순자'임. 그러면 순자는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성을 '변화'시켜야 함. 본성 '함양'이 틀린 것임. 하나 더 독해로도 풀림. 아래 설명 참고.

● 제시문: ... 성정(性情)의 변화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며 ...

● 독해: 성정(본성) '변화'

300) ㄴ, ㄷ

301) ㄱ, ㄴ, ㄷ

302) ㄷ

303) ③

Zola 갑(위홀), 을(아도르노) 사상가 누구인지 알 필요 없고 독해로 풀면 됨!

304) ①

305) ⑤

Zola 단순 독해(정보 확인) 문제임. 틀리신 분들은 진심으로 조언하건데 'Zola 생윤 O-바나나 제거 특강'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었는데 틀렸다면 다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하지 않는 1회성 수강은 남들의 실력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06) ㄱ, ㄴ

Zola ㄱ은 바나나 선지임. 이런 선지는 고민하면 안 됨!

307) ㄱ, ㄴ

308) 자기 중심적 관점 극복, 자기 문화만 옳다는 편협한 태도 극복, 나와 다른 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필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노력 필요 등등

309) ㄷ, ㄹ

310) ㄱ, ㄷ

Zola 서로 모순되는 2명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모순이 성립하면 둘 중 하나는 오답이기 때문임. 그러면 갑과 을이 모순이 된다. 혹은 을과 병이 모순이 된다. 결국 '을'이 틀렸다.

311) ㄱ, ㄷ

312) 공통점: 종교는 사회적 산물임

- 차이점: 뒤르켐은 종교의 순기능을 강조하나, 마르크스는 순기능도 결국에는 역기능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함.
- 313) 신들
- 314) ㄴ, ㄷ, ㄹ
- 315) ③
- 316) ⑤
- | | | | | |
|----|----|----|----|-----|
| 0% | 1% | 1% | 1% | 96% |
|----|----|----|----|-----|
- ☞ Zola 앞의 ebs 문제와 연계한 평가원 문제임. ebs와 연계된다고 해서 ebs를 안 보면 틀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 되지는 않음.
- 317) ①
- 318) ㄱ
- 319) ⑤
- ☞ Zola 선지 ①의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아서(약 10%) 놀랐음. (1) 제시문 근거 확인이 부족. 독해를 대충함. 제시문에 '다른 어떤 것'이라고 나옴. (2) 혹은 아는 지식을 그냥 들이대서 그러함.
- (1) 제시문-선지 연결
- [제시문]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성이 속된 것[俗]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성과 속이 '다름'
- [선지] 성스러운 공간은 주위 공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다.
- (2) 생활과 윤리 과목의 특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스러움이 드러나면 뭔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 장소는 뭔가 좀 이상하다, 왠지 경건해진다, 왠지 떠들면 안 되겠다.....생운은 별게 없는데 굳이 이런 것을 원전을 찾아봐야 한다면 혹은 '대단한(독특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나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 Zola 생운 0 강의를 다시 볼 것!!!
- 320) ㄱ, ㄴ, ㄷ, ㄹ, ㅁ
- 321) 갑: 하버마스, 을: 칸트, 병: 하버마스
- ☞ Zola
- (1) 갑은 '나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 논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에서 '답론'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 을은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에서 칸트의 '자율'(실천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따름)임을 알 수 있음. 이것이 지식(개념)과 독해의 연결임.
- (3) 병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규범만이 타당하다'는 것에서 하버마스임을 알 수 있음. 칸트의 정언명령은 타당성의 근거(이유)가 타인들의 동의에 있는 것이 아님.
- 322) ③
- 323) ㄴ, ㄷ
- 324) ㄱ, ㄴ, ㄹ
- 325) ②
- 326) ④
- 327) ㄴ, ㄷ, ㄹ
- 328) ㄷ
- ☞ Zola 25학년도 ebs 수완에서 질문이 많이 나온 부분을 응용한 문제임. (나)가 현실주의(모겐소) 입장임. 현실주의(모겐소)가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필요없다(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것이 평화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임.
- 329) ③
- 330) ㄷ
- 331) ④
- | | | | | |
|----|----|----|-----|-----|
| 2% | 3% | 3% | 82% | 10% |
|----|----|----|-----|-----|
- ☞ Zola (가)는 구성주의 입장임. 구성주의가 수능에 출제될지 여부는 ebs 수특/수완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332) ②, ⑤
- 333) ㄱ, ㄷ
- 334) ㄱ, ㄴ, ㄹ
- ☞ Zola 제시문 주목할 것. 세계 단일 국가로는 영구적인 세계 평화가 불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글임.
- 335) ㄱ, ㄴ
- ☞ Zola 제시문 주목할 것. '자연의 섭리(합목적성)'에 따라 평화가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글임.
- 336) ②
- 337) ㄱ, ㄷ, ㄹ
- ☞ Zola ㄹ. 종교·법·예술 모두 문화임.
- 338) ㄱ, ㄷ
- 339) ③
- 340)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가뭄이나 홍수, 그밖의 자연재해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기근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언제든 야당과 자유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근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민

주주의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끔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하면 됨.

☞ Zola 해외 원조 방법에 대해서는 논쟁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며, 개념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다. 적어도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알아두자. 제시문은 교과서에 언급된 롤스의 입장과 상통한다.

(롤스가 셴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임.)

341) ㄱ, ㄷ

342) ㄱ, ㄴ, ㄷ, ㄹ(23 ebs 수완 + 23-10교)

343) ㄴ

344) ㄱ, ㄴ, ㄷ

☞ Zola (가)는 싱어. (나)의 갑은 나딩스(배려 윤리), 을은 롤스, 병은 노직임.

345) ㄱ, ㄹ

☞ Zola 갑은 싱어, 을은 노직이라는 특정 사상가이지만 병은 특정 사상가 아님. 의무론의 입장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임. 그래서 발문(문두)에서 '사상가'라고 하지 않았음. ebs 해설에도 병은 의무론으로만 나옴.

346) ㄴ, ㄷ

347) ㄴ, ㄷ, ㄹ

348) ㄱ, ㄴ

349) ㄱ, ㄷ

350) ㄱ, ㄴ, ㄷ

수고하셨습니다!

믿고 따라오셈!!

열공+즐공=대박!!!



서울대 사회교육과 수석(졸) 강사의 콘텐츠 보물 창고